

오월단체 등 “5·18 왜곡 공소시효 없이 처벌 환영”

민주당이 공개한 '5·18 민주화운동법' 개정안 초안 반응 보니

내란죄 적용 어려운 현장 지휘관·병사들 반인도적 범죄 처벌 가능 시민단체 “빠른 법제화를”... 보수단체 “언론·출판 자유 침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5·18 민주화운동법' 개정안 초안과 관련, 5월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지역민들은 특히 5·18 왜곡·폄훼세력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공소시효 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5·18을 왜곡·폄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 일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의원의 법률안은 민주당과 범여군소 정당 의원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비슷한 법안들이다.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이 채택한 5·18 개정안 초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5·18 왜곡·폄훼한 세력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왜곡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5월 단체와 지역

개정안 주요 내용은

- 허위사실 유포·비방·왜곡·날조 7년이하 징역·7000만원이하 벌금
- 헌정질서 파괴 등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이 처벌 가능

시민사회단체 평가다.

개정안은 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헌정질서 파괴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경우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되면 내란죄 적용이 어려운 현장 지휘관,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5·18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한 단죄 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훈 유족회장은 “지난 40년간 5·18 유족들은 왜곡 폄훼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빠른 법제화로 유족들이 오랜 기간 겪었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중 부상자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5·18 왜곡세력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5·18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구속부상자회장은 “승고한 오월정신이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5·18이 정경의 도구나 상업의 도구, 정치권의 표결집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사실'과 다른 연구·학문·예술 활동을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들어 자칫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이와관련, “보수단체들이 지지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정의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박했다. 류봉식 진보연대 대표도 “보수단체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으나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의도적으로 폄훼·날조해 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흔드는 일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의 역사적 사실은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으로 역사적 사실이 정해진다는 보수단체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장현 전 시장 조카가 아들 사칭 사기

1000만원 상당 금품 챙겨

광주경찰, 검거 조사

경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아들들 사칭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윤 전 시장 친조카를 붙잡아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거액을 건넸다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조카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1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광역수사대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검거했다.

A씨는 능력이 없음에도, 윤 전 시장의 아들로 사칭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믿게

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B씨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혐의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시장의 조카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MBC, 정당한 이유 없이 전 대표이사 해임 배상해야”

광주고법, 5억여원 지급 판결

광주문화방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17일 전 광주MBC 사장 A씨가 광주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광주문화방송은 A씨에게 5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광주MBC 보도국장, 경영기획국장 등을 거쳐 2017년 3월, 3년 임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17년 12월 해임되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으며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광주MBC는 지난 2017년 1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 파행, 조직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회사 명예 및 국민 신뢰 실추' 등을 이유로 A씨의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MBC 본부 노조는 본사 경영진과 이들이 임명한 16개 지사 경영진 사퇴를 요구했고 MBC 11개 지부 노조들은 2017년 3월 지사 사장 인사와 관련, “감정적 사장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임명한 '자격 미달의 낙하산 사장'”이라며 시위를 했다. MBC 노조는 같은 해 9월,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해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지역 방송사 사장들을 전원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중요한 방송사업 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돼 대표이사로 업

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취임 직후부터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방송 파행과 제작거부 및 파업 등의 과정에서 10개월 만에 해임됐을 뿐”이라며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이 있다거나 그와 관련된 조직통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경영악화 원인은 방송 파행, 지역경제 불황 등에 있었던 것일 뿐 A씨의 경영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뒤 남은 임기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받은 이익은 해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으로 손해액에서 손익상계돼야 한다”며 손해배상 금액을 5억12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7일 광주시 북구 문산초등학교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북구청 시설지원과 직원들이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단속장비(CCTV)를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직장·정류장 등서 상습몰카 물리치료사 벌금 1000만원

자신이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직장 뿐 아니라 버스정류장, PC방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광주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버스 영상 촬영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허락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버스정류장, 주점, 결혼식장, A씨 직장에서도 범행이 이뤄진 점 등에다, 촬영 부위가 여성의 뒷모습으로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다매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것과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검찰, 고유정 또 사형 구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제2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2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욱)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소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살박이 의붓아들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